

정부 '의료 분쟁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의료분쟁 제도개선 본격화 "형사처벌 특례 제도로 의료소송 부담 덜어야" "특례 제도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더 어려워져"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 주원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분쟁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두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 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일 '의료 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의료 분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소아청소년과(소아과)·내과·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요리를 기피하는 주원인 중 하나인 고위험 진료에 따른 의료소송 부담을 덜어낸다는 취지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복지부는 의사 인력의 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소극적 진료를 줄이려면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마련해 의료소송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택하고, 필수 요리를 회피하도록 내몰는 이유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A 교수는 "소아암 환자의 경우 채혈이나 혈관주사 등 각종 시술이 어렵고 응급·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의료 소송이라도 걸리면 건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신속한 의료 분쟁 피해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진료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한 의료 분쟁 사건 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아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복지부는 환자 수술이나 시술 중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 보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만 중 사망사고 등 일부에만 적용해 오던 것을 소아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회장)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국가가 보상한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이 없으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현재 국내에서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데, 특례 제도까지 마련되면

환자가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안기중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의료 소송을 해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찮게 소요된다"면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형사소송의 결과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어 형사소송을 해도 의사는 대부분 무죄나 벌금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족이 의료 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 환자는 "의료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특정 직업에 따라 행법이 달리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완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 사고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평수 전 차의과학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의료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환자는 피해 입증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구제하고 의사들은 의사대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면기자



광주 남부소방, 의용소방대 정기소집교육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1일 복에 오지동에 위치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남부 의용소방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곡성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곡성소방서는 지난 1일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곡성군 관내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구례소방, 원거리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육 실시

구례소방서는 지난 1일 ~ 2일, 2일간 원거리 학교로 찾아가는 119이동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한 소방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례=박진호기자



함평경찰, 주민공동체 안전활동 전개로 치안파트너십 강화

함평경찰서는 "국향 대전" 행사기간 동안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의 주차 등 편의 제공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및 휴일 교통안전활동을 병행하는 등 치안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장흥경찰,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실시

장흥경찰서는 지난 2일 건산1구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고흥경찰, 동강 장날 찾아가는 정성 치안활동 펼쳐

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는 지난 3일 오전 동강 장날을 맞이해 박용기 파출소장과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언어장애 학생 매년 느는데 광주에 재활치료사 '0명'... "지원 확대해야"

김영호 의원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치료 필요"

광주와 전남지역 언어장애를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에 전문성을 갖춘 재활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특수학교 언어장애 학생은 2021년 1만9102명에서 2022년 2만3966명, 올해 2만7021명으로 늘었다.

이 중 일반학교(통합학급)를 다니는 언어장애 학생들은 2021년 1만4440명에서 2023년 2만1166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광주는 2021년 특수학교 144명·일반학교 583명(총 727명)에서 2022년 138명·632명(총 770명), 올해 196명·590명(총 786명)으로 매년 늘었다.

전남은 2021년 150명·539명(총 689명), 2022년 190명·570명(총 760명), 올해 124명·651명(총 775명)이다.

언어장애 학생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학교 현장에서 언어재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재활사는 광주는 없으며 전남은 특수학교 25명 뿐이다. 전국적으로도 81명이 특수학교에서 언어재활 상

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호 의원은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외부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향상을 위해 학교에 언어재활사의 의무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언어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부족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의 언어재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이선균, "유형업소 실장에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7)씨가 평소 알고 지낸 유형업소 실장에 속아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과는 전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차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유형업소 실

장 A(29)씨가 (나에게)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면서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전날 2차 경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질문과 조사에서 사실관계 등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변했다. (제가)기억하고 있는 것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2차 조사에서 혐의 인정했는가?", "국과수 정

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어떤 입장인가?", "현재 심경은 어떠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 (경찰 조사에서)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형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국과수는 최근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대마, 향정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최소 8~10개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씨가 유형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건넨 사실이 알려진 만큼, 해당 기간 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검사와 함께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가수 겸 배우 박용천씨도 소변과 모발 정밀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다른 체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발과 소변에 대한 국과수 정밀검정 결과에서 음성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다른 검사도 진행되고 있어 최종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레군(35·권지용)씨 등 5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유명 작곡가, 재벌가 3세 등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내사)를 벌이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레군씨도 6일 첫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뉴스스